

우리 동네 교통문화, 얼마나 달라졌을까? '25년 교통문화지수 발표

국토교통부, 2026. 2. 2.(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TS')이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25년 교통문화지수* 는 81.34점으로 전년(80.73점) 대비 0.61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가승인통계로 매년 전국 229개 시·군·구(인구 30만 이상 시, 인구 30만 미만 시, 군, 구 4개 그룹) 대상, 운전행태·보행행태·교통안전 항목에 대한 지표를 평가하여 지수화

이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법규 준수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국민의 일상 속 교통안전 의식이 점차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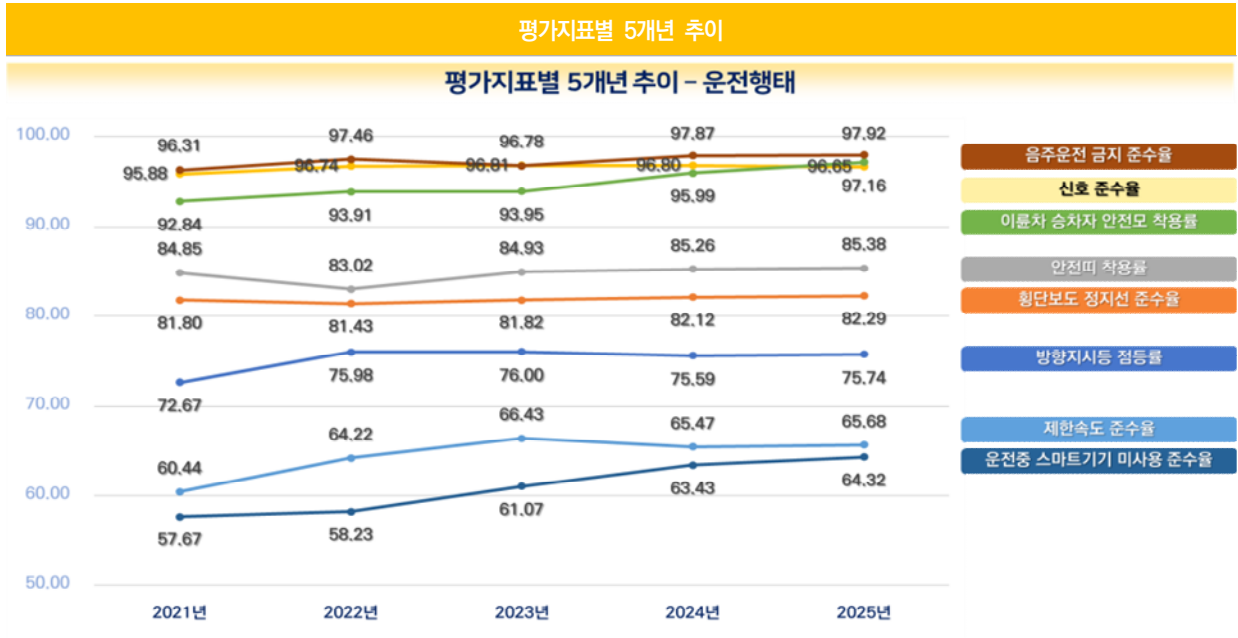
조사 항목별 결과

전국 운전행태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대부분의 지표가 꾸준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륜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률('2393.95%→'2597.16%), ▲안전띠 착용 준수율('2384.93%→'2585.38%), ▲음주운전 금지 준수율('2396.78% → '2597.92%), ▲운전 중 스마트기기 미사용 준수율('2361.07%→'2564.32%),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2381.82% → '2582.29%)은 최근 2년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신호준수율('2496.80%→'2596.65%)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보행행태 조사 결과,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2492.46%→'2592.80%), ▲횡단 중 스마트기기 미사용 준수율('2485.30%→'2585.86%)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반면, 무단횡단 금지 준수율('2474.66%→'2573.44%)은 전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행자 안전을 위한 생활 밀착형 대책과 인식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한편, 지방정부의 교통안전 관심과 노력 증가로 ‘교통안전 행정노력도’ (²⁴7.42점→²⁵8.26점) 점수는 상승했으나, ‘교통사고 사상자수’ (²⁴10.03점→²⁵9.65점) 점수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별 조사 결과

’25년 교통문화지수 조사 결과, 강원 원주시(91.58점, 인구 30만 이상 시), 경북 상주시(87.62점, 인구 30만 미만 시), 충북 괴산군(88.72점, 군 지역), 인천 계양구(89.56점, 자치구)가 각각 1위로 선정됐다.

또한, 전국 229개 지방정부 중 전년 대비 교통문화지수 개선율이 가장 높은 지방정부로 ‘전남 보성군’(86.37점, ’24년C급 → ’25년A등급)이 선정됐다.

이번 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된 지방정부는 특히 교통안전 예산 확보 노력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지방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현장 중심의 교통안전 정책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교통문화지수 하위 20% 이내 시·군·구 중 조사를 신청한 4개 지방정부를 선정, 맞춤형 개선안을 마련하는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수 지방정부

AI 기능 유형	내용	예시
30만 이상 시	강원 원주시	▶ 운전·보행행태 준수율 그룹 1위(안전띠 착용률, 횡단신호 준수율 전국 1위) ▶ 교통안전 우수(보행자 사상자수 그룹 내 1위)
30만 미만 시	경북 상주시	▶ 운전행태 상위(신호준수율 1위,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 4위) ▶ 교통안전 상위(사업용 자동차 사상자수 및 지방정부 교통안전 전문성 확보 A등급)
군	충북 괴산군	▶ 운전행태 상위(이륜차 안전모 1위, 안전띠 착용률 5위) ▶ 교통안전 상위(보행자 사상자수 및 지방정부 행정노력도 A등급)
자치구	인천 계양구	▶ 교통안전 상위(보행자·사업용 사상자수 및 지방정부 교통안전 전문성 확보 A등급) ▶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 노력(통학로 시설개선 및 합동 캠페인 등)
개선 우수	전남 보성군	▶ 운전행태 개선(정지선 준수율·신호준수율·방향지시등 점등률 상승, 47위→4위) ▶ 교통안전 개선(자동차 사상자수 감소, 교통사고 발생정도 51위→27위)

기타 조사 결과

기타 조사 결과, ▲ 고속도로 안전띠 운전자 착용률(’23 83.84%→’25 85.01%)로 점진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으나, ▲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23 69.41%→’25 69.65%)은 운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여, 전좌석 안전띠 착용 문화 확산을 위한 추가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은 고속도로에서는 ’23 66.67%에서 ’25 66.25%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고, ▲ 도시부도로에서는 ’23 58.86%에서 ’25 60.07%로 소폭 상승했다.

개인형 이동장치와 이륜자동차 관련 조사에서는 ▲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방향 준수율(’23 96.18%→’25 97.31%)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 이륜자동차 주행 준수율*(’23 59.39%→’25 63.82%)도 개선 흐름을 보였다.

* 불법주행(신호위반, 인도침범, 역주행, 차로위반, 정지선 위반, 불법유턴)을 하지 않고 교통법규를 준수한 비율

'25년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요약

항목별 결과

구분(점수)	2025년(A)	2024년(B)	증감(A-B)
전국 교통문화지수(100점)	81.34	80.73	0.61
운전행태(55점)	46.51	46.36	0.15
보행행태(20점)	16.91	16.92	-0.01
지방정부 교통안전 행정노력도(11점)	8.26	7.42	0.84
교통사고 사상자수(14점)	9.65	10.03	-0.38

그룹별 결과

구분	2024년				2024년 (B)	증감 (A-B)
	합계(A)	운전행태 (55점)	보행행태 (20점)	교통안전 (25점)		
전국(교통문화지수)	81.34	46.51	16.91	17.91	80.73	0.61
인구 30만 이상 시	82.73	46.84	16.92	18.96	82.81	-0.08
인구 30만 미만 시	82.35	46.90	16.87	18.58	81.97	0.38
군지역	80.38	46.19	16.88	17.32	79.95	0.43
자치구	80.93	46.15	17.06	17.71	79.59	1.34

평가지표별 결과

구분	운전행태(%)									보행행태(%)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방향 지시등 점등률	신호 준수율	안전띠 착용률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	운전 중 스마트폰기 미사용 준수율	음주 운전 금지 준수율	제한 속도 준수율	소계 (점)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	횡단보도 중 스마트폰기 미사용 준수율	무단 횡단 금지 준수율	소계 (점)
'25년 (A)	82.29	75.74	96.65	85.38	97.16	64.32	97.92	65.68	46.51	92.80	85.86	73.44	16.91
'24년 (B)	82.12	75.59	96.80	85.26	95.99	63.43	97.87	65.47	46.36	92.46	85.30	74.66	16.92
증감 (A-B)	+0.17	+0.15	-0.15	+0.12	+1.17	+0.89	+0.05	+0.21	+0.15	+0.34	+0.56	-1.22	-0.01

미래를 열어가는 새로운 성장엔진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

국토교통부, 2026. 2. 26.(목)

추진배경

현재 우리나라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생산성 정체로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이를 타개할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도심항공교통(UAM), 드론 등 첨단기술(AI·데이터·ICT)을 접목한 모빌리티 산업을 혁신성장을 견인할 미래 핵심 전략산업으로 삼았다. 기존 로드맵의 한계를 보완하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AI 기반 모빌리티 혁신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이라는 비전 아래 5대 핵심 전략을 담은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을 수립했다.

주요 추진과제

핵심전략 1 : 글로벌 3대 자율주행 강국 도약

(자율주행차 실증 본격화) 2026년 도시 전체가 실증구역인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하여, 200대 이상의 자율주행차를 투입하고 E2E(End-to-End) AI 기술 전환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고속도로 장거리 물류 운송에 자율주행 트럭을 투입하고, 교통취약지역(농어촌 등)에 자율주행 서비스를 확대한다.

(AI 인프라 및 R&D 지원) 자율주행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행 데이터를 표준화·공유하고, 산학연에 자율주행 전용 GPU 등 AI 인프라를 집중 지원한다.

(규제 합리화 및 서비스 육성) 신속한 기술 검증을 위해 '선허용 후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임시운행허가 대상을 넓힌다. 더불어 자율차 원격제어, 안전관리 사업을 제도화하고, 택시업계 등 기존 운수업계와의 상생모델을 구축한다.

핵심전략 2 : 도심항공교통(UAM) 및 드론으로 하늘길 이동 혁신

(UAM 상용화 기반 마련) 2027년까지 기체 인증, 운항, 보안 등 안전 체계를 정비하고, 주요 교통 거점에 공공 버티포트(이착륙장) 및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드론 산업 국산화 및 확산) 소방, 항공, 농업, 시설관리, 물류 등 5대 분야에 AI 기술을 융합한 드론의 국산화를 추진한다. 규제를 유예하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과 자유롭게 드론을 날릴 수 있는 '드론공원'을 확대하여 생활 속 드론 레저 및 배송 서비스를 안착시킨다.

핵심전략 3 : 탄소중립 모빌리티 대전환

(전기차 배터리 안전 및 신산업)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위험감지 기능을 고도화하고, 배터리 안전성 평가에 하부 충돌 기준을 포함시킨다. 또한, 배터리 구독(BaaS) 서비스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전한 성능평가제를 도입하여 재제조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한다. 기존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튜닝(EV 컨버전)하는 기술과 관련 제도도 마련한다.

(수소 인프라 및 신교통수단) 수소 광역버스 보급을 확산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다목적 수소충전소와 수소교통 복합기지를 지속 구축한다. 국내 비전철노선에는 친환경 수소전기동차를 실증하여 상용화하고, 최고속도 1,200km/h에 달하는 하이퍼튜브의 12km 테스트베드를 2032년까지 완공하여 아진공·자기부상 핵심기술을 검증한다.

핵심전략 4 :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 속 모빌리티

(물류 AI 혁신) 물류터미널 등 기존 인프라에 AI와 로봇을 융합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하철과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한 도심 공동 물류 체계를 실증한다.

(맞춤형 이동 서비스 확산)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운영 규제를 완화하고,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DRT 공공플랫폼을 만든다. 개인형 이동수단(PM) 대여사업 등록제를 신설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하며, 주차로봇 및 자율주행 원격운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MaaS(통합교통서비스) 활성화) 철도, 공유차, PM 등 모든 교통수단의 검색, 예약, 결제를 하나로 묶는 K-MaaS 플랫폼을 고도화하여 이동의 편의성을 극대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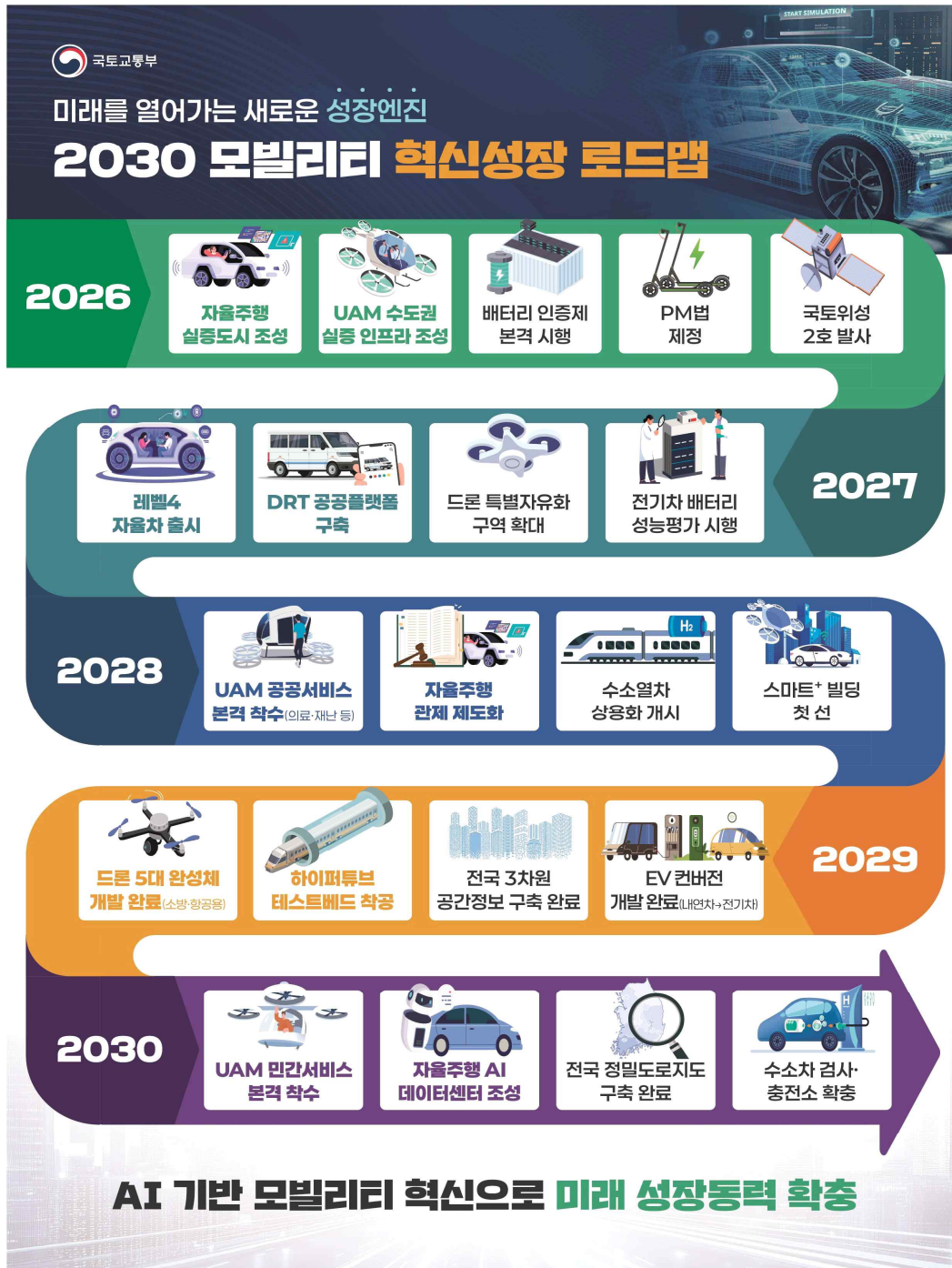
핵심전략 5 : 혁신 모빌리티 기반 도시 및 공간 조성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 자율주행과 UAM 운용의 핵심인 전국 법정도로 정밀도로지도와 주요 건물의 3D 실내공간정보를 2030년까지 구축한다. 입체격자 단위의 3차원 공간관리 기술을 통해 공중 이동체의 안전 운행을 지원한다.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광주 일대에 자율주행 데이터센터와 실증 인프라, 앵커기업이 집적된 미래형 미니 신도시(한국판 우븐시티)를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스마트+빌딩(Smart+ Building) 도입)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 UAM 버티포트 등 첨단 모빌리티의 수용이 가능하도록 건축물 설계 기준과 인증제도를 담은 특별법을 2026년에 제정한다.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 인포그래픽



AI 혁신기술로 도시문제 해결한다 2026년 AI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

국토교통부, 2026. 2. 25.(수)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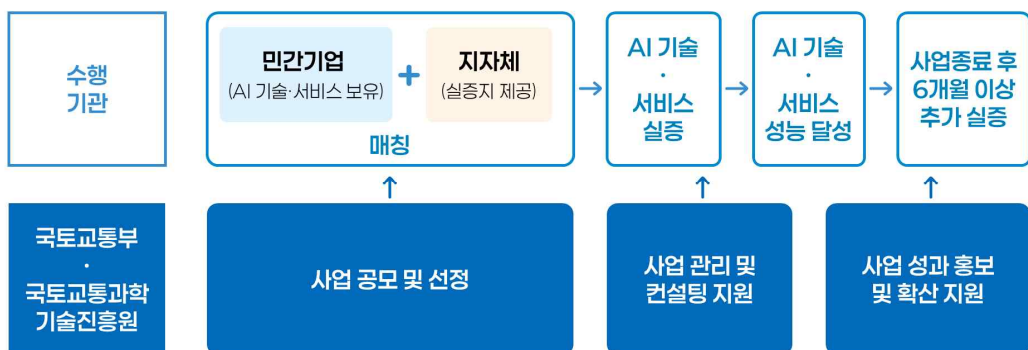
국토교통부는 인공지능(AI)을 도시 행정과 서비스 전반에 적용하는 'AI시티' 구현을 위해 민간의 혁신 기술을 실제 도시 환경에서 실증하고 시민 체감형 서비스를 확산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기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된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을 통해 축적된 민관 협력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급속히 확산되는 'AI 대전환' 흐름을 현장에 적용하여 K-AI시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대상 분야) AI 기반의 도시 인프라, 교통·물류, 안전·생활, 에너지·환경, 헬스·교육 등 시민 수요가 높은 생활 밀접형 도시 분야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관련 AI 기술 및 서비스 개발은 완료되었으나, 실제 도입이 도전적이고 모험적이어서 현장 환경에서의 기술 성능과 효과 검증이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집중 발굴한다.

(지원 규모) 총 30억 원의 예산으로 6개 기술을 선정하며, 선정된 기술당 최대 5억 원 이내의 실증사업비를 지원

(사업 기간) 계약 체결일(2026년 5월 예정)로부터 2026년 12월까지

AI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 개요



신청자격 및 수행기관 구성

기술 및 역량 조건

신청 기술 및 서비스와 관련된 특허등록(전용실시권 등 포함)을 필수로 보유해야 하며, 기술개발단계(TRL) 6단계(파일럿 규모 시제품 제작 및 성능평가) 이상의 기술만 지원 가능하다. 또한 인지, 사건 감지, 예측, 개인화, 상호작용 지원, 최적화, 추론, 콘텐츠 생성 중 하나 이상의 AI 기능 유형을 포함한 실증 역량을 보유해야 한다.

AI 기능 유형	내용	예시
인지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 등 데이터 식별 및 분류	이미지 및 객체 감지, 얼굴인식, 오디오·음성·텍스트 인식
사건 감지	데이터의 패턴 및 이상 징후 감지	위험 탐지, 인적 오류 감지, 모니터링
예측	데이터 기반 결과 예측	인구 예측, 최적 적합 데이터 매칭, 지능형 네비게이션
개인화	사용자 프로필 개발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검색 및 브라우징 기반 추천 시스템, 맞춤형 금융서비스
상호작용 지원	인간-기계 간 대화형 상호작용 지원 등	챗봇, 음성 비서, 감정 분석
최적화	학습 후 최적의 해결방안 제공	물류 관리, 입찰, 광고, 실시간 시나리오
추론	모델링, 시뮬레이션 기반 결과 추론	채용 시스템, 법적 논증, 진단
콘텐츠 생성	자연어 처리, 딥러닝 기반 자동 생성	글쓰기, 창작, 오디오 및 비디오 생성

수행기관 구성 및 수요처 매칭

민간기업이 '대표기관'이 되어 단독으로 참여하거나, 대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을 '공동기관(최대 3개)'으로 포함하여 참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실제 실증 환경(대상지)을 제공하고 운영을 지원할 지방자치단체(최대 2곳)를 수요처로 반드시 매칭하여 '실증지원 협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향후 추진 일정 및 접수 방법

사업설명회

2026년 3월 4일(수) 오후 2시,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 (사전등록 필요)

신청 및 접수

2026년 3월 20일(금)부터 3월 30일(월) 17:00까지, 이메일 (next@kaia.re.kr) 제출

결과 발표 및 계약

4월 중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통보하며, 5월 중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실증 착수

시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

추진절차	추진일정	주요내용	비고	
사업 공고	'26.2.25. ~3.30.	• 공모계획 공고	국토교통부/ KAIA	
↓				
사업설명회	'26.3.4	• 기업, 수요처 대상 공모 설명 및 질의응답	KAIA	
↓				
신청서류 접수	'26.3.20. ~3.30.	• 신청서류 접수 - 공모신청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신청기업→KAIA	
↓				
사전검토	'26.4월	• 규제저촉 여부, 중복성, 서류누락, 선정제외대상 여부	KAIA	
↓				
선정평가 계획 수립	'26.4월	• 선정평가 절차, 일정 등 계획 수립 및 안내	국토교통부/ KAIA	
↓				
선정 평가	서면평가	'26.4월	• 최종 지원대상의 1.5배수 이내 선정	선정평가위원회
	발표평가	'26.4월	• 최종 지원대상 선정	선정평가위원회
↓				
선정결과 보고·통보	'26.4월	• 선정결과 신청기관에 통보	국토교통부/ KAIA	
↓				
계약 체결	'26.5월	• 사업계획서 보완 및 사업계약	KAIA↔선정기관	
↓				
사업 시행 및 관리	'26.5월~ '26.12월	• 사업 시행 및 예산집행 관리	KAIA/선정기관	